

##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윤 덕 민 /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미국의 오바마 신 정부 등장이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내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절 북핵 협상과 관련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직접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필요하다면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이외에 현재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핵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는 차별성 있는 정책을 밝힌 적은 없다. 사실 오바마 당선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 다소 모순된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확산방지체제(NPT)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개진한 바 있다.

오바마 진영의 외교안보팀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 노선을 계승한다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클린턴 정권 말기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제기되던 시점에서의 정책이 재추진될 것이 아닌지에 관한 관측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 차기 정권의 대북 정책이 유화 일변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페리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레드라인(redline)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부시 정권과는 달리 redline이 존재했으며 redline을 넘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Plan B)도 갖고 있었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여 외교를 통한 해결을 적극화하지만 북한의 일탈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동원하는 선일 것이다.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벼랑 끝 외교를 재가동하여 6자회담을 형해화 시키고 북미양자구도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더욱이 소위 '통미봉남' 전술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한다. '통미봉남'이든 무엇이든 간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핵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북한의 눈높이에서 무리하게 남북 대화를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 없는 해결은 불가능하다. 북핵 협상이 잘 진행되어 핵 폐기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면, 결국 대북 지원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일 것이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일희일비'(-喜-悲)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한편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유화 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막상 영변 핵 원자로로부터 일방적 연료봉 인출이라는 사태에 즈음하여 미국이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훈선을 빚기도 했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INPUT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 없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조율된 대북 정책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 문제의 제기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은 최근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건국 6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북한 체제의 향방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6자회담에 입각한 대북 핵협상을 이끌던 미국 부시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북한에 대한 직접 협상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한반도 장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나는 북한이 핵 포기과 함께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연착륙하는 가능성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남북 협력도 본격화함으로써 한반도는 기능주의적으로 점진적인 남북 통합이 가능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고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자원이 고갈되고 체제의 불안정이 높아지며 김정일 이후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으로 체제의 혼란이 초래할 가능성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핵을 보유한 북한 정권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고는 최근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오바마 차기 정부 등장을 계기로 북핵 협상, 특히 6자회담의 향방에 관해 논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북한 정세 평가

2008년 8월 중순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으며, 건강이상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 공개를 통해 건재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1994년 북한의 절대적 지도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사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최대의 체제 위

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1990년대 북한은 주체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주의 권 붕괴에 따른 심각한 자원 부족 상황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통제·계획 경제에 입각한 당과 정부의 기능이 기능부전(機能不全)에 처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백만 단위의 아사자가 나왔고 황장엽 서기의 망명에서 보듯이 엘리트 층의 동요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카드를 통한 대외 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을 정치 사회의 전면에 내세우는 비상관리체제의 제도화를 통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 체제 존속의 결정적 원인은 대외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체제 붕괴를 초래할 자원 고갈이 북한 체제 붕괴의 지정학적 파장을 우려한 주변 관계국들의 지원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정부나 체제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어려움과 비교할 때, 북한의 현 상황은 일견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취약성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북한 사회 및 경제는 대외 환경에 보다 취약한 상황이다.

첫째, 북한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이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어 있다고 본다. 북한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제한적이지만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 늘어왔으며, 조중국경지역, 탈북가족, 한국과의 금강산·개성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주민들의 탈북 현상은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현상으로 되었으며, 북한 관료 체제에 있어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다.

둘째, 선군 체제하의 북한은 제한적 물자조차 일반 경제 부문이 아닌 핵무기 개발 등 군사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downward spiral)을 보이고 있다. 경제 운용의 개혁과 선군 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순환은 계속되며 체제는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파산 상황으로 '빈곤의 늪'에 빠져 있으며, 산업 구조는 공업 기반의 붕괴로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대외 지원 증대로 외견상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0년대 위기 이후 이렇다 할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자연 발생적인 암시장과 계획 경제가 혼합된 혼합 경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 경제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2007년 현재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은 북한의 총 무역에서 80%이상을 차지하며 북한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sup>1)</sup> 특히 한국의 대북 수출은 비상업성 교역으로 사실상 지원 형태로 볼 수 있고 대중 교역은 상업적 교역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원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대북한 지원도 상당한 규모라고 볼 때, 북한 경제의 대남·대중 의존도는 상당히 심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보수 정부 등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 위기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외 원조 여력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금융 위기의 여파가 북한과 같은 빈곤 국가들에게 가장 일차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는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북한 리더십에 있어서 후계 구도가 아직 공고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모든 사회가 수령을 정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북한의 수령 체제에 있어서 김정일의 유고는 '뇌수(腦髓)'의 부재를 의미한다. 김정일 이후의 지도 체제가 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의 유고는 북한 체제에 있어 심각한 상황이며 상당한 혼란을 수반할 수 있다.

결국 현재 북한 상황은 첫째, 만성적인 경제 파산 양상을 유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개방 정책이 부재하며, 둘째,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감소하고 있고, 셋째 그러한 가운데 지도 체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북한 체제의 존속 가능성은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결단 가능성, 김정일의 리더십 변화 그리고 대외 환경이다. 특

1)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2007년 남북한 교역은 17억 9,700만 달러, 중조교역은 19억 7,400만 달러로 총 무역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히 대외 환경은 북한 체제 존속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북한이 핵무장 노선을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강화될 것이며, 그 결과 체제의 불안정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는 경제·사회면에 있어서 대외 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은 상당히 심화되어있다. 북한의 경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회복 여부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에 달려 있다. 북한이 핵 무장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 재건을 위한 긍정적 대외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핵화를 우선하는 한국의 실용 정부 출범과 중국의 대북한 피로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 체제의 이상이 생길 경우, 북한 체제의 일대 혼란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후계 구도가 공고화되지 않은 가운데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 상황은 북한 내 권력 투쟁을 야기할 수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혼란에 대해 관련국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북한 정세를 가늠하는 관건이 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등장과 6자회담 전망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중대한 전환을 촉발하였다. 우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전환되었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한 간접 대화 방식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전환은 핵 폐기 목표를 분리하여 초기 단계에서 플루토늄 핵 능력 제거를 우선하고 핵무기는 다음으로 단계로 넘기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가 명시되었지만, 핵 실험이후 2007년 2.13 합의에는 ‘핵무기’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는 부시 정부가 핵무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플루토늄 양산 체제 방지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2007년

10.3 합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불능화와 신고에 있어서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부분이 사실상 빠졌으며, 특히 2008년 10월 검증 합의에 있어서도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 한다는 구절이 들어감으로써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의 특성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미국은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잠정적으로 묵인했다고 보며 이와 관련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갖는지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미국의 오바마 신 정부 등장은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시절 북핵 협상과 관련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직접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필요하다면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 다소 모순된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확산방지체제(NPT)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개진해 왔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최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발표하여 차기 정부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구체적인 '채찍과 당근'을 제시하며 핵 포기를 위한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임을 밝힌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자동적으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도록 핵확산금지체제(NPT)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다. 물론 일반적인 오바마 외교독트린으로서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북한에도 적용되며 이란과 유사한 접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댓가로 평화협정체결, 북미·북일 수교, 경제·에너지 지원, 동북아안보협력 등의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 오바마 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직접 협상을 전개했던 2기 부시 정부의 외교팀이 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 거론이 없는 점은 북한 문제의 비중이 낮다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북핵 협상 노력에 혼선을 주지않고 6자회담의 틀을 깨는 빌미를 북한에게 주지 않으려는 고려가 작용

했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화당 정부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 8년을 회고해보면 부시 정부는 말로만 강경했다. 대포동을 발사 해도 핵실험을 해도 그리고 핵기술을 시리아에 이전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만일 민주당 정부였으면 어땠을까? 2002년 알 고어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정보를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 2004년 미 대선 당시 켈리 민주당 후보는 협상이 안 되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만든 페리 前국방장관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시 영변 시설에 대한 폭격을 주장했다. 소위 ‘인내의 한계점’(red line)이 없었던 부시 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정부는 분명한 인내의 한계점과 함께 협상이 통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행동계획(plan B)도 갖는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진지한 직접 협상을 전개할 강력한 의지를 갖지만 비핵화의 원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 직접 협상과 정상회담까지 시야에 둔 정책을 표방할 경우 6자회담의 유효성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대포동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위협 등 벼랑 끝 외교를 재가동하여 6자회담을 형해화 시키고 북미양자구도를 끌어내려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 대해 소위 ‘통미봉남’ 전술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1993년 클린턴 당선자는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하자, 북한은 NPT 탈퇴를 통해 당시 남북간 핵 협상 구도를 차버리고 북핵 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해 북미 양자 협상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한국이 이를 수용하여 북미 양자 대화 구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향후 북핵문제는 6자회담보다 북미 직접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효용성은 여전히 크다. 6자회담은 미국은 물론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관심과 힘을 하나로 모아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틀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북한의 일탈되는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6자회담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틀로서의 중요성 이상으로 한반도는 물론 안전을 위한 협력의 틀로서의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6자회담은 관계국들의 입장 조정과 협력을 통해 북한 정세의 연착륙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다. 북한 정세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가하는 6자회담은 유사시 관계국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정세의 연착륙을 관리하는 경험으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협력하는 다국간 협력 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틀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결어 : 우리의 대응

북한은 최근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해 과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이 사살된 충격적 사건도 있었지만, 대남 비방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대남 압박을 강화하여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점진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해가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신 정부의 길들이기라는 목적도 있지만 지도자의 건강 이상과 맞물려 과민 반응의 측면도 있다고 본다. 물론 새로운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가 남북한사에서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의 대북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 등장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의 향방과 관련 중대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벼랑 끝 외교를 재가동하여 6자회담을 형해화 시키고 북미 양자 구도를 끌어내려 할 것이

다. 더욱이 소위 '통미봉남' 전술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한다. '통미봉남' 이든 무엇이든 간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핵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북한의 눈높이에서 무리하게 남북 대화를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 없는 해결은 불가능하다. 북핵 협상이 잘 진행되어 핵 폐기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면, 결국 대북 지원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일 것이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일희일비' (一喜一悲)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 핵무기 폐기 문제는 현재의 협상 틀 내지는 속도로는 매우 요원한 실정이다. 아마도 상당기간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기묘한 공존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도 부시 정부 이상으로 북한 문제외의 다른 과제들에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 위기 극복은 물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결 등의 긴급한 과제에 비추어, 부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정부도 당분간 북핵문제의 관리에 치중할지 모른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중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바마 정부에게 강력히 입장을 피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협상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핵무기 조기 폐기를 위한 방안을 조율하고 오바마 차기 정부팀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유화 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막상 영변 핵원자로로부터 일방적 연료봉 인출이라는 사태에 즈음하여 미국이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INPUT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핵 없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미일간의 조율된 대북 정책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을 형해화 하고 북미 양자 구도로 가려는 북한에 대해 한일 양국은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조율된 입장으로 6자회담 틀을 견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정세의 연착륙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장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나는 북한이 핵 포기과 함께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연착륙하는 가능성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남북 협력도 본격화함으로써 한반도는 기능주의적으로 점진적인 남북 통합이 가능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고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자원이 고갈되고 체제의 불안정이 높아지며 김정일 이후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으로 불안정이 초래할 가능성이다.

국제사회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여하히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 문제 대한 대처를 일관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統